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군사력 발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21lancer@asaninst.org

I. 머리말

2022년부터 3년여를 끌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파장이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0월 북한은 러북 밀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본격화했고, 이는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한이 당면한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 나름의 포석이었다.¹⁾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前場)에서 얻은 그들 나름의 교훈과 러시아의 경제·군사적 지원을 자신들의 군사력 건설에 활용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기존의 위협에 더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고도화 중인 핵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전력 운용의 융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재래 군사력의 현대화를 병행할 것이고, 이에 러북 밀착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재래 군사력에 관한 한 북한보다 질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었던 기존 남북 군사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핵과 현대화된 재래 전력의 결합은 북한이 더욱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대남전략을 구사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및 전력구조 역시 기존과 다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군사력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우리는 어떤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한 러북 밀착의 추세와 밀착 요인을 먼저 살펴본 후, 러북 간 군사협력의 방향성과 추세를 전망해 볼 것이다.

1) 이에 대해서는 차두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대남 적대감 고취: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의 딜레마 탈출 시도」,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27, 2024. 10. 22 참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할 때 북한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 과연 이러한 방향이 단기적으로 남북 군사력 균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가를 평가한 이후 북한의 핵·재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사력의 건설 방향을 제언해 보려 한다.

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밀착

1. 기존 러북 밀착의 동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이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전쟁이 러북 밀착의 유일한 동기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1990년대 중후반, 특히 러시아에서 푸틴 시대가 개막된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관계 회복 추세에 들어섰고, 2019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 사이의 최초 정상회담이 실시되었다. 2020~23년 ‘COVID-19’으로 인한 불가피한 국경봉쇄 조치가 있었지만, 2023년부터 러북관계는 그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북 밀착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러한 선택이 북한 대남/대외 전략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1인 독재체제가 준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대외 전략의 핵심은 ‘수령제’ 유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수령제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 확고한 우위를 견지함으로써 수령의 핵심 임무 중 하나인 ‘조선반도 혁명’기반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건이었다.²⁾

대남전략 면에서 북한을 우위로 한(북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 우위를 보장할 경제 및 군사 역량의 지속 확충, 즉 ‘북한 내 혁명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 사회 내의 북한 동경 심리를 강화함으로써 ‘한국 내 혁명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북한 우위를 인정하고 수용할 국제 환경의 조성(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으로, 미국의 한반도 문제 관여·개입 배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주도 통일 지지, 그리고 북한의 의지에 반하는 강대국 간 거래 차단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한

2) 1960년대 이후 북한은 한반도 혁명을 위해 기존의 무력 격화 노선을 지속하는 한편, ‘자주’와 ‘민족’ 개념을 활용한 한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달성,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북한 주도 통일을 지향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2023년 12월에 이루어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은 ‘통일’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민족 개념에 입각한 기만적 평화통일론을 철회한 것뿐이고, ‘두 국가’로서의 적대관계에 기반한 통일(영토 완정·절령·평정·수복) 목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간의 국력 격차는 1970년대 이후 북한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속 변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결정적인 우위를 지니는 군사 무기(핵무기)의 보유를 통해 남북한 간의 국력 균형을 일거에 역전시키는 한편, 한국에 지속적인 핵 협박(Nuclear black-mail)을 보냄으로써 북한의 우위 구도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 김정은 시대 대남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압박, 핵 개발에 대한 기존 우호국(러시아, 중국)의 부정적인 입장에 부딪쳐왔고, 북한으로서는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더 나아가 재밀착은 러시아에 북한 핵무기를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궁극적으로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대북 군사 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확대에 미온적인 중국을 자극하여 중북 관계에서의 레버리지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3각 연대가 형성될 경우 '새냉전'적인 구도 하에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높아지고, 강대국 간 거래에 의해 북한의 목표가 희생되는 상황 역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시각에서도 북한과 밀착은 자신들의 다극주의적 세계 질서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러북 밀착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을 갈등의 대리자로 내세움으로써 직접 충돌이 부담스러운 미국과 관계를 관리할 수 있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 개발의 시초를 제공했으면서도 북한 핵 개발을 외형상 지지해야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북 밀착을 통해 북한에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³⁾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밀착의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북 밀착의 촉발 요인은 아니더라도 촉진 요인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22년 2월 24일(우크라이나 현지 시각 기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생한 이후 북한은 줄곧 외교적으로 러시아 편에 섰다. 그래서 3월 2일(뉴욕 현지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즉각적 철군을 요구하는 UN 특별총회 결의안이 통과될 당시, 북한은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 러시아와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한 5개국의 하나였다.⁴⁾ 2023년 북한 내 'COVID-19' 국면이 해소되면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의 국경 재개 방침을 표명했고, 러시아와 각종 고위급 대표단을 교환하면서

3)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이러한 분석은 그동안 여러 학자에 의해 지적됐다. 이러한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사건을 뛰어넘는 러북 밀착의 맥락과 요인에 대한 이해는 분명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박중수, 「현대 러북관계의 이해: 후견관계에서 동반관계로의 전환 모색」, 명인문화사, 2021;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January 11, 2024 참조.

4) 「조선일보」, 「유엔의 '러 철군 결의안' 141대 5 압도적 통과」, 2022. 3. 3.

협력에 박차를 가했다. 러시아는 7월 26일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70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고, 이는 오히려 중국보다 격이 높은 대표단으로 평가되었다. 쇼이구는 김정은을 면담하여 푸틴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북한의 ‘무장 장비 전시회’를 참관한 데 이어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도 참석했다. 당시 북한 매체에 의하면 김정은과 쇼이구는 “국방안전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⁵⁾

이러한 밀착은 2023년 9월 12일(러시아 현지 시각) 러시아 극동 보스토티치 우주기지에서의 푸틴-김정은 간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었고, 10월 18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으며, 북한이 11월 18일 발사에 성공한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는 러시아 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⁶⁾ 이와 같이 2023년에 들어 북한과 러시아는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협력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⁷⁾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고전과 포탄 등 군수물자 조달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러시아와, 고강도 국제제재, ‘COVID-19’로 인한 체제 내구력 소진,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던 북한은 밀착 추세를 강화했다. 2024년 6월 19일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러북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러북 新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조약은 유사시 군사적 개입 문구가 포함되는 등(제4조) 러북 간 군사동맹의 복원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⁸⁾ 2024년 10월에 들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을 파견한 것이 알려지면서 러북 간 군사협력이 본격적으로 외부에 확인되었고,⁹⁾ 이후 북한은 병력을 추가 파병함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였다.¹⁰⁾ 현재 종전 협상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진행되고 있어 전쟁의 최종 결과를 이야기하기는 이른 단계지만,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일부 장악당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고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는 데 기여한 것이다.

5)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연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었다」, 2023. 7. 27.

6) 『조선일보』, 「국정원 러시아, 북에 위성 설계도와 데이터 분석 제공한 경황」, 2023. 11. 24.

7) AP News, “US says North Korea delivered 1,000 containers of equipment and munitions to Russia for Ukraine war,” October 14, 2023.

8) 『BBC News 코리아』, 「러북 조약: ‘무력침공시 지체없이 군사원조’…4조 조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024. 6. 22.

9) 『연합뉴스』, 「북특수부대 1만2천명 우크라이나 파병…1천500명 이미 러시아에」, 2024. 10. 18.

10) AP News, “North Korea appears to have sent more troops to Russia to back its war against Ukraine, Seoul says,” February 27, 2025; Reuters, “What we know about North Korean troops joining Russia’s war in Ukraine,” February 18, 2025.

3. 향후 러북 밀착 전망

현재 나타나고 있는 러북 간 밀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더라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11월 1일 북한 외무상 최선희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라브로프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러시아 동지들과 승리의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와의 굳은 결속을 강조했고,¹¹⁾ 이는 양자 간 협력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의 가닥을 잡을 경우, 북한과 러시아는 이와 관련된 행사(특히 러시아 전승절, 혹은 러북 신조약 체결 1주년 기념식 등)를 통해 러시아의 승리와 북한의 기여 등을 서로 치하함으로써 향후에도 변함없는 러북 협력을 과시할 것이다.

물론 이를 견제하는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미리 협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 시사 등을 통해 러북 밀착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러북 밀착에 대해 겉으로는 평양과 모스크바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중국 역시 대북 영향력 및 對러시아 통제력 약화를 우려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려 할 것이다. 전통적 러북 관계사에서 일시적인 밀착에도 항상 신뢰의 문제가 작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리 관계가 개선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 수순에 들어서더라도 밀착을 유지할 동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특히 북한의 시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으로서는 중북 무역 회복이나 확장이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경제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이 2024년 11월 18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자원부 장관을 환대할 것 역시 러시아와 경제협력에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 카드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당분간 이를 유지하는 것이 미리 협상이나 세계 여타 지역에서 영향력 확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2025년에도 러북은 계속된 연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 김정은의 방러를 통한 또 한차례 러북 정상회담도 예견된다. 북한은 러북 밀착을 중-러-북 연대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11) 『연합뉴스』, 「러 외무 '러북 군 관계 긴밀'…北최선희 '러 승리까지 함께」, 2024. 11. 1.

III. 북한이 얻었을 교훈

1. 핵 개발의 역설적 가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이에 참전한 북한의 입장에서 이 전쟁의 최대 교훈 하나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1945년 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주요 국가들은 모두 핵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했고, 재래 무기와는 달리 재앙적인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 각 국가는 다음번 세계대전은 바로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공멸(共滅)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1970년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체제가 출범하였고, 핵확산금지조약을 전후하여 핵무기 보유국 간에 (1) 핵무기 보유국들이 함부로 핵무기 비보유국들을 침략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2) 핵 위협을 함부로 가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만들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것이 깨진 첫 번째 사례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러시아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측들은 역사상 보지 못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한편, 러시아 핵전력에 대해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고,¹²⁾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라브로프 외교장관 등도 상황에 따라 핵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협적인 언급을 계속 내놓았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1990년대 중반 미국 및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우크라이나 역시 이러한 핵 위협 카드를 사용하려 했을 것이고,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무기가 지니는 효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정치적 협박수단으로서 ‘핵 그림자(Nuclear shadow)’의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먼저 시작한 핵 협박의 선례를 그대로 답습했다. 북한 김정은은 그들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기 시작했고, 2022년 9월 8일의 “핵무력정책법” 공표를 통해 사실상 핵무기를 재래 무기처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러시아는 2024년 기존의 핵 교리를 변경하여 (1) 러시아와 동맹국(벨라루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이 있을 때, (2)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있을 때 핵으로 대응할

12) “Ukraine invasion: Putin puts Russia’s nuclear forces on ‘special alert’,” *BBC News*, 28 February, 2022.

수 있게 핵 교리를 변경했는데,¹³⁾ 이는 결국 정권에 타격이 올 만한 조치가 있을 경우, 핵무기로 공격받지 않아도 핵 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역시 자신들의 “핵무력정책법”에 입각하여 이와 유사한 교리를 채택할 것이고, 핵무기의 지속적 보유를 전제로 한 군사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 첨단과 재래 전력의 균형, 그리고 합동 훈련

2022년 2월 24일(유럽 현지 시각 기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전쟁은 예상외로 오래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압도적인 전력 차로 인해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 전역(全域)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세를 면치 못하였지만, 미국 및 NATO 회원국들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이후의 소모전에서 동남부 4개 주를 러시아에 강제 병합 당했음에도 선전(善戰)을 이어왔다. 이는 러시아가 대대급 전술단(Battalion Tactical Group: BTG)으로 개편된 현대적 전력을 보유했지만, (1) 전쟁 초반 지나치게 전선을 확대함으로써 전력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2) 우크라이나 전장 환경에 대한 확실한 숙지가 부족했으며, (3) 드론 등 비교적 저가 무기체계를 적절히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쉽게 분쇄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이 반드시 첨단 전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각 작전 상황, 그리고 작전 지역에 따라서는 고성능의 무기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는 곳도 있지만, 아닌 지역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사례를 실증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가 전장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리한 전황을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전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전력을 조합하여 동원할 수 있는 적정 High-Low Mix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교훈은 향후 북한의 군사력 건설 과정에도 반영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전 및 對드론전 전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그 이상으로 북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외국군과의 합동 훈련의 중요성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 한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관측이 존재하지만, 전쟁 초반 북한군이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데에는 대체로 평가가 일치한다. 이는 북한군의 빈약한 방호 장비나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함께 작전을 전개해야 할 러시아군과 합동 작전 경험이 없다는 데에

13) *BBC News*, “Putin approves changes to Russia’s nuclear doctrine,” 19 November, 2024.

기인한 것이었다고 본다.¹⁴⁾ 러시아는 중국과는 연례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북한과 군사훈련 사례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러북 신조약의 제8조, 즉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조항은 향후 러북 간 합동 군사훈련 근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¹⁵⁾ 이는 향후 러북 간 군사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3. 주요한 군사적 후원자의 확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선전의 배경에는 미국과 NATO 회원국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북한 역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복원한 이유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자강’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현실도 고려했을 것이다. 북한이 재래 전력 측면에서도 일부 현대화를 추진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재래 전력과 핵전력 동시 건설은 북한의 능력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다. 핵전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갖출 경우, 오히려 전력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대남/대외 도발 시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 즉, 모든 군사 상황에서 핵전력에만 의존해야 하고, 사소한 분쟁이 핵전쟁과 보복으로 연결될 위험을 감안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개발 이후에도 재래 전력의 현대화를 포기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군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했다고는 하지만, 김정은 역시 군의 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조합적 이익 (corporate interests)을 제공해야 하고, 이의 전형적 사례가 높은 국방예산과 재래 전력 증강이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 후원국이었지만,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양은 자신들의 재래 전력을 보완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추가적 후원자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을 것이다.

14)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주요한 합동 군사훈련이 관측되거나 보도되지 않았다. 2025년에 들어 전장에 적응된 북한군이 전에 비해 좋은 전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에서 합동 훈련의 필요성은 북한에 더욱 크게 외닿았을 것이다.

15) 이 조항은 1961년 체결되었던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구이다.

IV. 러북 밀착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군사력 건설 전망

1. 핵전력

2023년 러북 밀착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석가가 우려한 것이 이러한 밀착이 군사적 협력, 특히 북한의 탄약 및 병력, 그리고 러시아의 핵기술이라는 위험한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었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 들어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에 탄약 등의 군사물자를 지원한 사실이 포착되면서,¹⁶⁾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일단 2023년 10월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군사 정찰 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통해 러북 밀착의 효과를 체감한 평양으로서는 가능하다면 이 추세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기에는 아직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러북 관계사에서 누적된 불신을 고려할 때, 아직은 러시아와 북한 모두 서로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무엇보다 핵 관련 기술은 상당히 고가의 것으로 북한 재래 무기와 거래되기에는 러시아의 손해가 더 크다. 또한, 러시아는 러북 간의 거래가 결국 NPT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한다. 실제로 푸틴은 2024년 3월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굳이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여전히 그 가능성을 무시할 필요는 있다. 막대한 비용과 파급 영향을 고려할 때 당장 러시아가 다탄두 기술이나 위력이 증대된 핵탄두 기술, 혹은 북한이 원하는 핵추진잠수함 기술의 모든 부분(원자로 포함) 등을 북한에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향후 러북 밀착이 지속될 경우에 러시아가 실제로 이 위험한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러북 밀착이 본격화되던 2024년 9월 김정은의 현지지도 형식을 빌려 북한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최초로 공개했고, 2025년에 들어서도 무기급 핵물질의 증산을 강조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북한이 핵탄두로 전환 가능한 핵분열물질을 계속 늘려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적극 장려하거나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보다 북한 핵 능력의 러북 공동 자산화를 추구할 경우,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일부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¹⁶⁾ AP News, “US says North Korea delivered 1,000 containers of equipment and munitions to Russia for Ukraine war,” October 14, 2023.

¹⁷⁾ NK News, “Putin says North Korea doesn’t need Russian nukes, downplaying cooperation,” March 13, 2024.

5천급으로 추정되어 기존의 ‘김군옥 영웅함’ 보다 큰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북한 표현)’을 북한이 건조하고 있다는 점은, ICBM은 아니더라도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러시아가 설계 및 일부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¹⁸⁾ 핵추진잠수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제공한 군사적 지원을 비교적 큰 단건(單件)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추진 원자로가 제공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러시아로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카드이다. 즉, 핵추진잠수함과 관련된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면,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의 지원에 북한을 묶어두기 위한 푸틴의 카드일 가능성도 있다.

2. 재래 전력

북한은 방호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신형 전차와 각종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탑재한 장갑차를 개발하고, 무인기 전력을 증강하며, 원거리 공격 능력을 향상한 신형 함정을 건설하는 등 재래 군사력 부분에서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래 전력을 강화해 왔다.¹⁹⁾ 그러나 북한의 주요 무기체계는 주력전차(MBT)의 경우 대부분 2세대 전차에 속하며, 일부 1세대 전차도 존재한다. 북한이 2020년 선보인 신형 전차 경우 기존 러시아의 2세대 전차와도 다른 유형의 것으로, 공격력과 방호력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이런 설계 개념이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전투기 전력의 대부분은 2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3세대 이상은 최대 100기에 불과하다. 해군력도 수상 전투함(프리깃급) 2대 이외에는 대부분이 연안방어급 함정이며, 세대 역시 1~2세대에 불과하다.²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러북 밀착을 통해 舊모델이 대부분인 주요 무기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현대화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로부터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통한 군비 경쟁 능력 보강]으로, 북한이 군사력 건설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러시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GDP 대비 25%가량 인²¹⁾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이는 러시아가 연 수십억 달러 이상을 꾸준히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러시아의 GDP 규모에 비해 큰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도 국제제재에 놓여있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및 국내 경제 회복 소요에

18) 『연합뉴스』, 「덩치 키워 ‘핵잠수함’ 만든다는 북한…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의」, 2025. 3. 8.

19)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22』, 국방부, 2023. 2, pp.27~28.

20) 이에 대해서는 IISS, *Military Balance 2023*, 2023 참조.

21) 이는 미국 국무부의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 2021*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21*, 2021. 12 참조.

직면한 러시아가 이를 꾸준히 제공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이러한 재원을 러시아로부터 받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 금액은 북한의 병력 제공, 탄약과 미사일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전시 비축분의 회복, 북한 병력 사상에 따른 보상 등에서 금액 중 상당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러시아가 저런 규모의 금액을 지속해서 북한에 공급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對러시아 파병을 통해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내부 민심 안정을 위해서라도 러시아 지원 금액의 상당수를 인민경제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러시아의 대북 무기체계 직접 제공]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비교적 최신의 무기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며, 항공기의 경우 북한의 보유 기종 중 최신에 속하는 MIG-29, Su-27, Su-47 등, MBT의 경우에는 T-72 혹은 T-80급의 기종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러시아산 무기가 미국산 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할지라도 이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MIG-29의 대당 가격은 수천만 달러에 달하고, 1개 비행대대(20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억 달러가 소요된다. 4세대 전투기에 속하는 MIG-29 후기형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Su-35의 경우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T-80 전차의 경우에도 100대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인데, 러시아가 3세대 혹은 4세대급의 전투기를 공급하려 해도, 이미 기존에 판매 계약을 맺은 국가를 위한 생산분을 우선 만들어내야 한다. 즉, 북한에 특화된 공급을 위해서는 최소 3~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또한 4세대 이상의 전투기의 경우 북한에 의한 카피(copy) 생산과 기술 유출 우려 측면에서 최신기종을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할 가능성은 낮다.

세 번째 방안은 [북한의 러시아 국방 공급망 편입]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특정 무기체계의 라이선스 생산을 제의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훼손된 전 세계적 영향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Global South’ 국가들이나 분쟁 지역에 계속 무기체계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인건비가 상승된 러시아 입장에서 이들 국가의 소요에 맞는 금액의 값싼 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을 러시아의 국방 공급망 안에 끌어들이며 북한을 중저가 무기의 생산 기지화할 경우,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과 북한 재래 전력 증강 지원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북한 역시 인건비가 극히 저렴한 북한의 특성을 활용하고, 방산 저변을 업그레이드하며, 비교적 최신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 소득(북한판 방산 수출)의 증가를 불러오는 다중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실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러시아가 분쟁 지역이나 Global South에 공급하는 무기는 기본적으로 MBT의 경우 3세대 이하, 전투기의 경우에도 3세대 이하 혹은 일부 초기형 4세대가 기본으로, 이 정도의 무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는 북한이 기대한 전력 증강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러시아 역시 북한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자국산 무기체계 카피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4세대 이상의 기종에 대해서는 기술 전수를 꺼릴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러시아 국방 공급망 편입을 방관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북한을 자국 국방 생산망의 일종의 하청체로 인식할 것이나,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자체 방산부문의 활성화를 꿈꿀 것이고, 이러한 동상이몽이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3. 남북 군사력 균형에의 의미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러북 밀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1~2년의 단기간 내에 재래 전력 차원의 남북 군사력 균형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제외하면 전투기의 경우 80%가 1~3세대, MBT의 경우 적어도 60%가 3세대 이하의舊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전투기는 39기의 F-35A, 59기의 F-15K, 131기의 KF-16, 34기의 F-16 업그레이드형으로 구성되어 전체 기종의 절반가량이 3세대 이상이고, MBT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3세대~4.5세대에 속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구모델도 전반적 전력 면에서 북한에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군 전력의 경우 AEGIS함 등 잠수 전력을 제외하면 전반적 전력이 북한을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연합체제를 고려할 때, 미국의 증원 전력으로 인한 최신 기종 투입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력 격차는 더욱 커진다. 북한이 이에 비해 백중 열세, 혹은 호각으로 전력 균형을 맞추려면 전투기의 경우 현재 기준 30%가량(100대 이상)을 3세대 이상으로 교체해야 하고 MBT의 경우에도 30% 이상을 단기 교체해야 한다. 러북 밀착이 중기적으로도 지속되고, 위의 세 가지 방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5~10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핵전력의 지속적 건설에서도 북한이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탄두 기하급수적 생산’을 비롯한 핵 개발 정책은 현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예산상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넘어 핵 능력의 실제 전력화를 위한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데, 우선 북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핵탄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 제조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매년 이 무기체계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감가상각분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핵/미사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향후 미북 협상을 통해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무기’의 집중 개발에 주력하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의 보복에 대비한 제2격(2nd Strike) 기능의 향상을 위해 SLBM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북한이 신형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무기화 단계에서는 한 적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척의 건조를 위해 수억 달러는 투입해야 한다.

V. 한국의 대응 방향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핵 및 재래 전력의 급속한 증강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기존 군사력 건설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러북 밀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력의 질 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20여 년 이상 꾸준히 ‘국방 개혁’ 및 ‘국방 혁신’을 지속해 무기체계의 세대별 구성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 힘든 질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력의 현대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주요 전력에 관한 한 북한보다 1~2세대를 앞서가야 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 예산 확보 및 전력 증강의 기본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고려할 때, 미래 우리의 전력 구조를 구상하는데 있어서도 “과연 모든 부대를 균일하게 첨단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군의 모든 전력을 일반적인 군사 혁신이나 미래전의 추세에 따라 표준화하는 것이 예산상의 부담이나 효율성 면에서 무리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군의 미래 위협 대비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하는데, 특정 위협(非국가 행위자들의 테러, 혹은 非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전통적 방식의 전쟁, ‘목함지뢰’ 등 북한의 과거전 유형 도발 등)에 대해서는 첨단 전력 위주의 대응이 오히려 불필요할 수도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무기체계의 획득 및 방산정책과도 연결되는데, 첨단 무기 위주의 구성은 오히려 2선급 전력 건설을 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산시장 진출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군사력 구성에 있어 첨단 전력, 전통 전력, 실험형 선도 전력의 조합 정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일반적 추세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다.

미래 전력 건설을 위해서는 확고한 국가전략의 밑그림이 필요하고, 군사 과학·기술 측면에서 일정 기간의 Catch-up이 불가피하다면, 개념 발전상의 선도성이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스텔스’(stealth) 기능의 탑재 여부였다. 스텔스 기능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스텔스 역시 목적 자체이기보다는 수단에서 발달한 기능, 은밀한 침투,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보장함으로써 고가의 기체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숙련된 파일럿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스텔스 기능은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의 하나로 ‘현재’의 가장 효율적 수단의 하나일 뿐이며, 미래로 범위를 넓혀 보면 스텔스 이상으로 다양한 기술적 발전의 고려가 가능하다. 무인항공기(UAV)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전력 증강과 관련해서는 ‘차기’를 선정할 때 ‘차차기’와 연계에 대한 장기 계획이 함께 입안되어야 하고, 장기 전력 증강에 대해서라면 현재의 일반적 “미래 예측하기”를 넘어선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

미래 한반도 전쟁 억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접근이며, 이는 한국군의 자체 전력 증강을 의미한다. 2000년대 중반 ‘국방 개혁’이 시작된 이래 ‘국방혁신 4.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사력 건설 비전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핵전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우리 단독의 전쟁 억제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능력 조기 구축에 최우선적인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북한 핵 위협 대비 ‘3축 체계’의 건설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그 사실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지만, 동맹도 일종의 거래 관계이다. 미국의 핵 자산에만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비용이나 자율성 등에서 과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핵 능력 발전에 있어 우리 자신의 능력, 즉 ‘3축 체계’ 관련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신뢰성 있는 우리의 재래 전력이 구비되어야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북한의 핵 사용 유혹을 봉쇄할 수 있으며, 지휘 통제 능력 및 감시정찰(C4ISR) 능력에 있어 미국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높아진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맹국 한국의 활용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안정적 안보 공약의 이행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온다. 또한 ‘3축 체계’는 단독으로 기능하기보다는 한미 연합 전력의 범주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TDS)의 관점에서 ‘3축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북한이 향후 핵 및 재래 전력을 지속 건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역시 억제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 공격 시에 공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적 거부 개념에서 더 나아가 공격 능력 건설 자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북한을 ‘2중 군비 경쟁’의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한반도 억제 구도대로라면,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절한 거래 관계를 구축한다면 한국은 재래 전력에 있어 북한을 압도할 전력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 즉, 북한은 한국과 재래 군사력 면에서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게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고, 자신들의 핵 위협으로 인해 초래될 미국의 핵 보복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핵전력과 재래 전력을 모두 기존 수준 및 기계획 대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군사력 최강대국인 미국과 핵 군비 경쟁을 벌이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미래에 북한이 재래 전력과 핵전력 모두를 충분히 건설할 수 없는 환경을 강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22』, 국방부, 2023. 3.
- 박종수, 『현대 북러관계의 이해: 후견관계에서 동반관계로의 전환 모색』, 명인문화사, 2021.
- 차두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대남 적대감 고취: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의 딜레마 탈출 시도」,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27, 2024. 10. 22.
- 『연합뉴스』, 「北특수부대 1만2천명 우크라이나 파병…1천500명 이미 러시아에」, 2024. 10. 18.
- _____, 「러 외무 ‘러북 군 관계 긴밀’…北최선희 ‘러 승리까지 함께」, 2024. 11. 1.
- _____, 「덩치 키워 ‘핵잠수함’ 만든다는 북한…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 2025. 3. 8.
- 『조선일보』, 「유엔의 ‘러 철군 결의안’ 141대 5 압도적 통과」, 2022. 3. 3.
- _____, 「국정원 ‘러시아, 北에 위성 설계도와 데이터 분석 제공한 정황」, 2023. 11. 24.
-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아련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었다」, 2023. 7. 27.
- 『BBC News 코리아』, 「러북 조약: ‘무력침공시 지체없이 군사원조’…4조 조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024. 6. 22.
- AP News, “US says North Korea delivered 1,000 containers of equipment and munitions to Russia for Ukraine war,” October 14, 2023.
- _____, “North Korea appears to have sent more troops to Russia to back its war against Ukraine, Seoul says,” February 27, 2025; Reuters, “What we know about North Korean troops joining Russia’s war in Ukraine,” February 18, 2025.
- BBC News, “Putin approves changes to Russia’s nuclear doctrine,” 19 November, 2024.
- IISS, *Military Balance 2023*, 2023.
-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January 11, 2024.
-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21*, 2021. 12.